‘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윤관석 체포안 찬성 139 · 반대 145 · 기권 9명
이성만 체포안 찬성 132 · 반대 155 · 기권 6명
민주당 내 ‘가결 우세 입장’과 반대 결과 나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들에 체포동의안에 표결을 마친 윤관석(오른쪽) 무소속 의원과 이성만(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적나라한 물증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한 것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라며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다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은 이정근씨의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동정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고려해도 1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혹은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매장된 산성·봉수 등 가야 유산 발굴 허용을

민주 안호영 의원 ‘백두대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법정 규정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 어려워”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8일 “전북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여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시대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보존돼 있고, 이들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나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조사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군은 천오백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지만,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태 마스터스 시군 파견인력 불이익 없어야”

김성수 도의원, “원 소속 기관 근무평정 시 복귀하면 인사상 불이익 발생… 전북도는 외면”

전북도의회 김성수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이 12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앞서 정책질의를 통해 전북도가 아·태 마스터 시군 장기파견자 인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는 운영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시군에 인력지원을 요청했고 6월 말 기준 1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2022년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가 2023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일부 직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파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 직급 근무 기간 중 파견근무 기간이 절반 이상을 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중 복귀 예정인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파견직원들은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시 후순위 관리로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라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의원은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시군 직원들에게 남은 것은 인사상 불이익뿐이라고.”지적하며 ‘전북도가 장기파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시간당 강수량 30mm 이상 호우 피해 대비

윤수봉 도의원, ‘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의회 상임위 심사 통과… 22일 본회의 의결 거쳐 시행 예고

시간당 강수량 3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전북도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등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하?반지하 주택?주차장,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이후 침수방지시설의 사후관리와 적극적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에 따른 물막이판과 하수역류방지밸브를 말한다.

윤수봉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주변 혹은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도민들께서는 항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침수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333개소가 있으며 이중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251개소로 재해위험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 6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민 안전 밀접 조기경보 시스템 제대로 구축해야”

도의회 문건위, 도민안전실 소관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서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2일 제401회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먼저,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문하며, 이상기후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확대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도민안전실 징수결정액의 과다 징수된 문제를 지적하며, 그 원인을 묻고 세입 변경 사항이 있다면 결산 추경에 반영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신축 사업의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설계변경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를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명시이월된 조기경보시설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최근 재난문자 발송 문제점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재난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도민안전실 예산의 성과지표 중 전략 목표와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질의하며, 도민들의 안전 생활 실현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 목적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최선을”

도의회 행자위, 자치행정국 등 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는 등 꼼꼼하게 심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해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비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계상의 사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추경에 편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세입을 보수적이고 관행적으로 추계하고 예산집행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세입 추계와 철저한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눈먼 돈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표현되는 것은 철저하지 못한 정산관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성과관리와 꼼꼼한 정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국공립·사립 어린이집 급여 균형있게 지급토록 해야”

도의회 환복위, 복지여성보건국 등 대상 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6월 12일 제401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갖고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상황 및 노인복지기금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사립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급여 차이에 대해 지적하며 균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심혈관 질환 관련해 응급 사각지역인 서남권에도 응급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보조금 반납액이 여성가족과, 감염병관리과가 많은 사유에 대해 물으며 인건비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올해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감염병 및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에서 사업을 취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며 예산을 확대 편성하더라도 시군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노력했다. /김재훈 기자

진안군의회 정례회 개회

만 나이 정착 진안군 조례 개정안 등 15건 안건 심의
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명진 의원과 이루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 객토 지원사업의 확대’와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9면〉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2일과 13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민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안건들에 군민의 뜻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산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